

보도시점 (온라인) 2024. 10. 1.(화) 12:00
(지면) 2024. 10. 2.(수) 조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로 185만 건 수정, 수도권 부여된 주소 건수(약 174만 건)넘었다

-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시범 실시 두 달(7.15~9.15)간 매일 약 3만 건, 총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
- 민간 활용 주소 데이터 오류 감소, 업무 처리 시간 절약 등 호평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이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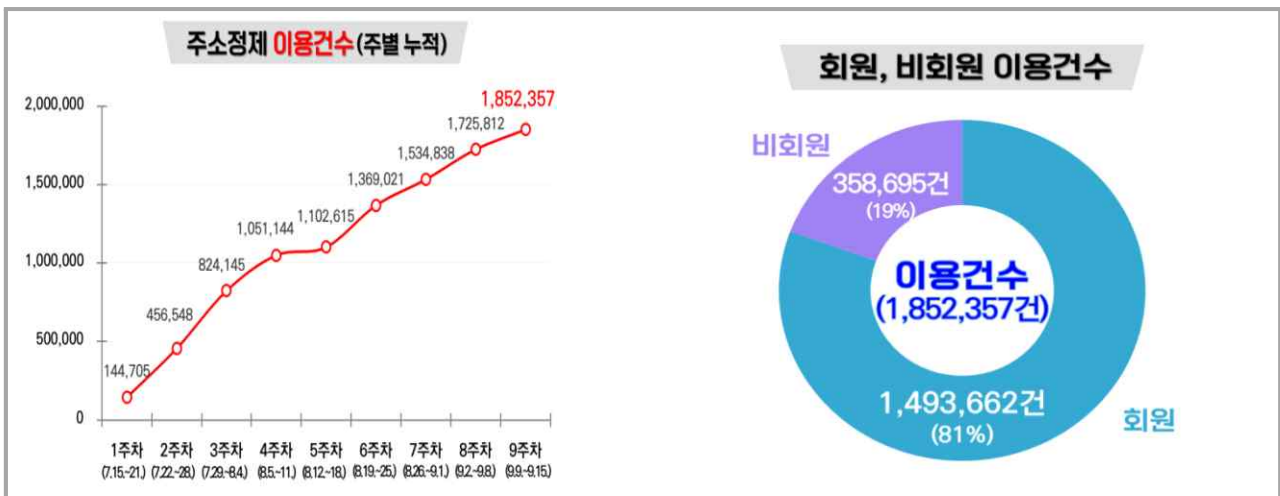
-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ㄱ씨,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물은 도로명 주소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표준 주소를 입력하지만, 일부 쇼핑물은 배송지를 수기로 입력하도록 해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의 우편 번호(주소) 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오류율이 높아 배송과 반송으로 인한 고충이 컸다. 얼마 전 행안부의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된 ㄱ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자 주소 오류율이 2% 이내로 줄고, 일일이 주소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ㄱ씨는 서비스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동종업계 거래처에도 추천했다.
- 동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ㄴ씨는 관리하고 있는 동문회 주소록의 도로명주소 형태가 제각각이고, 아직도 00동 ㄷ아파트와 같이 지번 주소로 입력된 회원도 많아 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인터넷 기사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알게 되어, 동문회 주소록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자 주소 명부가 표준 주소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ㄴ씨는 표준 형태 주소를 통해 얼마 전 동문회 초대장도 간편하게 발송하고, 지역별 관리도 간편해졌다.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약 185만 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란 구주소, 정보 누락, 오타 등의 형태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비표준화된 주소를 표준화 해주는 서비스이며, 누구나 1일 최대 1만 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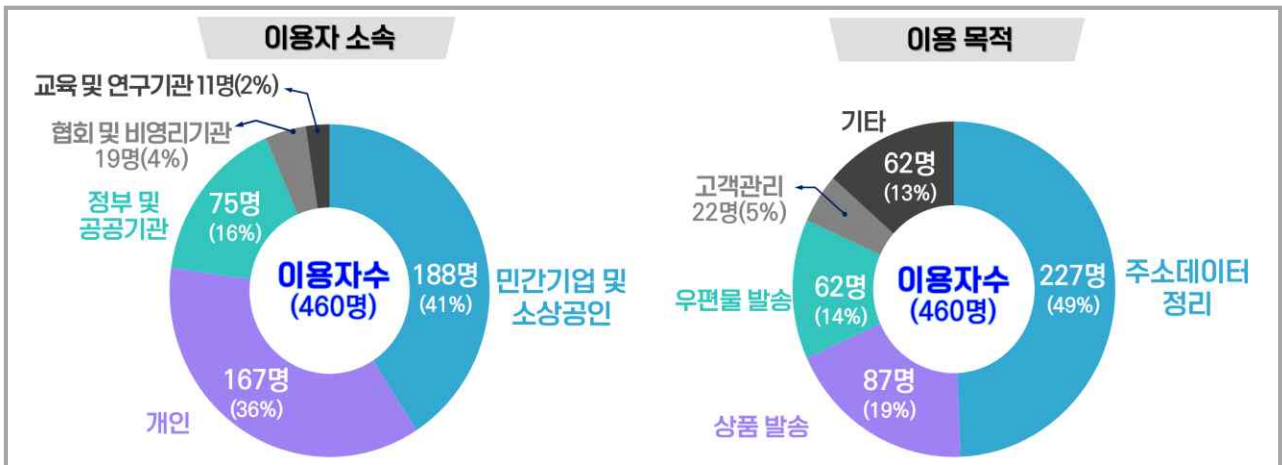
-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소를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잘못된 형태의 주소로 주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무상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2달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이용건수)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만 9,402건이며, 누적 이용 건수는 185만 2,357건으로 나타났다.



- 매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29,447건)만큼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며, 누적 건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체 도로명주소 부여 건수(1,739,022건)를 넘어선 수치다.
-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jusoclean.or.kr)’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 8,050명이며, 이용자 수는 460명(회원 210명, 비회원 250명)이었다.
- (주 사용충·목적) 이용자의 소속은 민간기업 및 소상공인 188명(41%), 개인 167명(36%), 정부 및 공공기관 7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목적은 주소데이터 정리 227명(49%), 상품발송 87명(19%), 우편물 발송 62명(14%)으로, 시범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주소 데이터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누리집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이 많았다.

□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포털 검색이나 누리집 주소 입력(jusoclean.or.kr)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비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 서비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등 주소정제가 필요한 국민께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담당자	주무관	박용준 (044-205-3560)

<건의>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먼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국민이 겪는 주소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번거롭고 복잡한 주소 입력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 데이터 관리 효율성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안전부의 모든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유용한 서비스가 11월 30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의 편리함을 실감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정식 서비스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이 혁신적인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귀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선도적인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높게 평가해 주시고 담당자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소정제 시범 서비스 기간 이후,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후 정식 서비스 전환 여부를 검토하여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